



## ‘함께’ 한다고는 했지만...갈길 먼 ‘하나되는 오월’

### 오월 44주년 시대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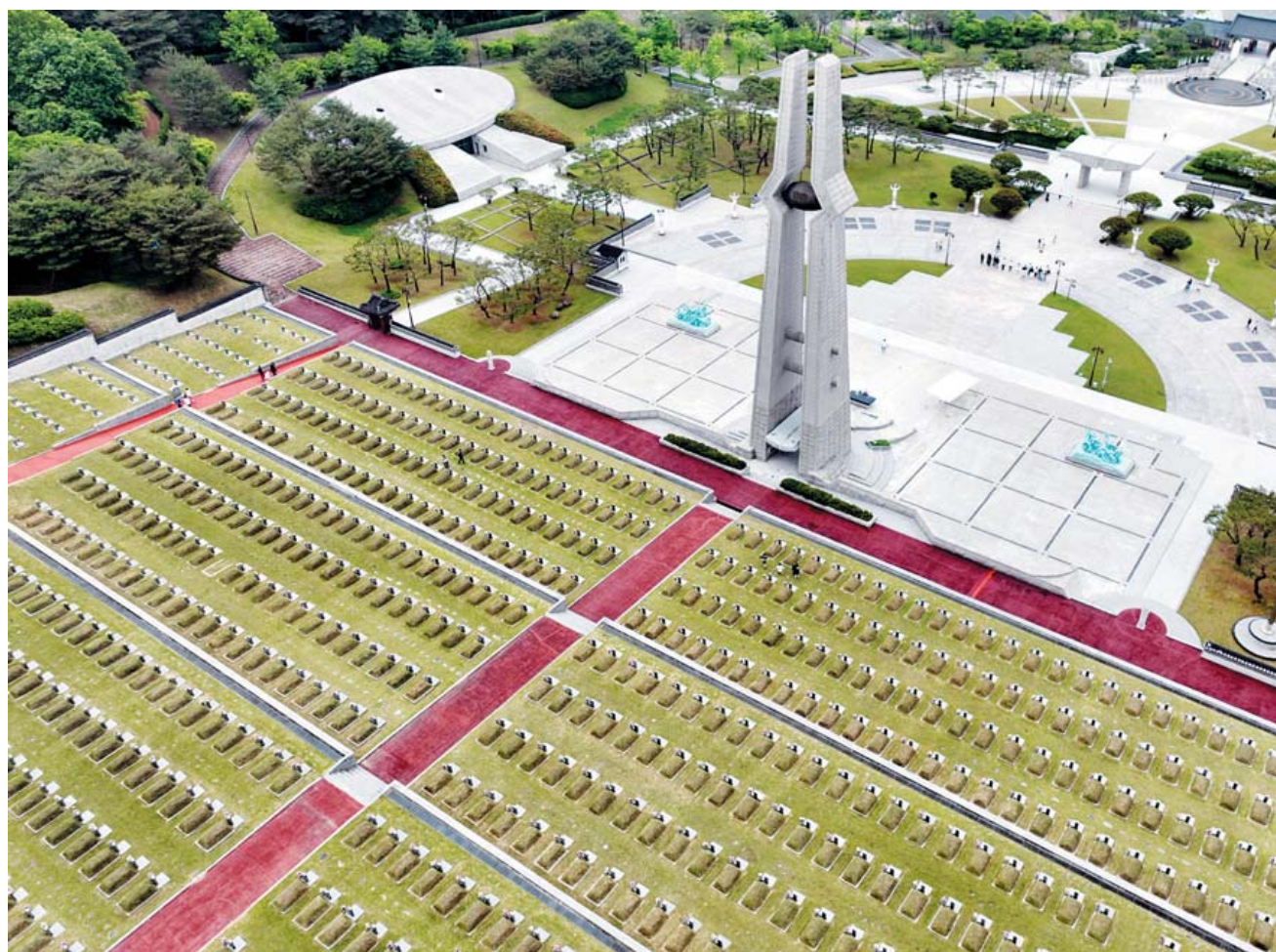
<1>공법단체-시민사회 갈등

다시, 오월이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다. 4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5·18 관련 해결되지 않은 의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제44주년 5·18의 시대적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5·18의 현주소, 해결 방안, 지향점 등을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 ‘2·19 대국민선언’ 대립각...3단체, 행사위 참여하며 ‘일단락’ 부상자회 정기총회 또 무산 내용...공로자회도 정상화 시급

최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와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오월 공법단체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민사회와의 해묵은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올해 행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의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일부 공법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3단체 모두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또 신규 집행부 구성을 통한 단체 정상화를 꾀한 부상자회의 경우 지난 주말 열려 했던 정기총회가 또 다시 무산되며 내용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신입 회장 등을 선출한 공로자회 역시 구성원 간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등 반목이 여전히 올해도 대동정신과 동떨어진 오월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2일 오월 공법 3단체와 만남을 갖고 올해 행사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3단체의 행사위원회 참여는 성사되지 않았다. 일부 공법단체에서 행사위 참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단체는 오는 11일 부상자회 임시총회 이후 행사위 합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부상자회는 지난 4일 정기총회를 열어 신규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황일봉 전 회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임시총회소집허가’가 지난달 25일 받아들여져 연기를 결정했다. 현재 황 전 회장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무효화한 뒤 임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전 회장 재임 때인 지난해 2월 19일 부상자회는 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2·19 대국민 선언’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로 밝혔으나 광주·전남 시민사회에 선 “과도한 당사자 주의가 빚은 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시민



다시 오월...‘민주묘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대학생 단체는 물론, 외국인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6일 오후 광주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모습. /김예리 기자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독자 노선을 고집했고 결국 지난해 행사위원회에서 탈퇴했다. 같은 해 유족회마저 “3단체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행사위원회를 나오면서 공법 3단체와 시민사회 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후 부상·공로자회가 각 회차들을 자체 징계하면서 내부 갈등은 심화됐다. 공로자회의 경우 지난 3월 신입 윤남식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용도 잦아드는 듯 했지만 회원들이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공로자회 역시 정상화까지 갈 길 멀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올해 각 단체의 대표 오월 행사인 부활제와 민주기사의 날을 개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족회는 오는 17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할 추모제를 준비하며 2개 단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행사위 독자 참여는 쉽지 않아 반쪽짜리 44주년 행사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의 한 원로는 “행사위에 시민사회만 있게 된다면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법 3단체가 44주년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5·18 44주년 행사 주제처럼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반목·대립하고 있는 3단체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 김영록 지사, ‘의대 공모’ 꼬인 실타래 풀까

### 12일 목포대·순천대 총장·목포시장·순천시장과 ‘5자 회동’ “권한없는 道 공모 반대” 순천지역 ‘입장 변화 여부’ 주목

전남 동부권의 반대로 전남도의 ‘공모’를 통한 국립의대 설립 대학 추천’ 구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순천대 총장, 목포시장·순천시장과 ‘5자 회동’을 갖기로 해 성사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대와 순천시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회동을 통해 동부권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 실제 공모에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목포대·순천대·목포시·순천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15일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3일 후인 18일엔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과 회동을 갖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의대 공모와 관련, 김 지사가 동부권·서부권의 이해 당사자와 함께 만나려는 것은 12일 간담회가 처음이다. 전남도의 ‘공모 방식 국립의대 설립 대학 추천’ 계획에 대해 목포지역에서는 공모 참여 입장을 밝힌 반면, 순천지역의 경우 “전남지사는 의대 설립 관련 법적 공모 권한이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남도가 의대 공모 성사를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대 신설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 공모 외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하기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문을 보내 ‘도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해 늦어도 9·10월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의대 공모 관련 일정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정부가 5월 중 각 대학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반영해 확

정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12일 공동간담회와 관련, 양 대학과 양 지자체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며 “양 대학 총장과 단체장이 모두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기획-‘독서교육이 미래교육...’ 9면  
 성공도전, 청년창업기를 만나다 12면  
 KIA, ‘실책’ 줄여야 ‘대권’ 잡는다 16면

##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전광판 사진**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